권두언

인구정책『패러다임』의 인식전환

趙 南 勳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지난 30여 년에 걸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의 진전 등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 나라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도 시의적절하게 발전되어 왔다. 정부는 1962년 이후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1996년 6월부터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새로운『패러다임』으로 인구정책을 전환하였는데 인구정책을 보건·복지분야의 사업활동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당위성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개발시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통해 적정수준의 출산 및 피임실천의 기반을 견고하게 다져왔다. 199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인구정책 전환에도 불구하고 1994~1997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은 1.75명에서 1.71명으로 감소한 반면에 피임실천율은 77.4%에서 80.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국민의 소자녀 규범과 피임실천이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정부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인구자질 향상 및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일단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의 인구정책은 인구억제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측면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패러다임』의 구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향후

향후 인구정책은 '생식보건'과 관련된 현안문제와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이 추구해야 할 몇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계획사업은 모성보건, 에이즈 및 인공임신중절, 성차별, 청소년 성문제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생식보건'(Reproductive Health Care)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실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콘돔사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콘돔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 나라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선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은 수준에 있는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청소년 성문제대책, 에이즈예방 등 피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목적 수단으로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성비불균형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여성지위 향상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성비불균형 현상은 전통적인 남아선호관의 잔존 외에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 태아성감별을 위한 의학기술의 발전과 인공임신중절의 보편화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비불균형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남녀차별을 불식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사회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 등 노인복지수요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생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의료·주거 등 기초생활보장을 내실화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중산층 노인에 대해서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같은 실버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치매노인(현재 약 20만명으로 추정)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강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의료서비스의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적정수준으로 저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계획의 중요성이 평가 절하될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구개발에 관한 국제회의』(1994년 이집트 카이로)와 『사회개발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1995년 덴마크 코펜하겐)를 기화로 세계 주요국가의 인구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복지정책과 통합하여 가족계획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인구정책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식보건'과 관련된 현안문제와 더불어 노인문제·가족해체문제·자녀양육문제 등 국민건강과 가족복지의 증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으로 이를 지속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